

전주시 '이지콜' 전국 운행 개시

〈교통약자 콜택시〉

목적지가 전주시인 타지역 장애인들도 이용할 수 있어... 콜택시 3대 증차·2대 교체 계획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장애인과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교통약자들을 위한 콜택시인 이지콜 운행서비스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이지콜의 전국 운행 시행 첫날인 1일 이른 아침 전주종합경기장에 위치한 이지콜센터를 방문, 이지콜 운행자 등 직원들을 격려했다. 전주시 교통약자 콜택시(이지콜)는 지난 20일 전주장애인복지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시찰과 간담회에서 윤소하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에게 전국 모범사례로 극찬을 받은 정책이다.

이지콜 서비스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타 지역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거나 명절 고향방문이 어려웠던 교통약자들의 이동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지콜 서비스 지역이 확대되면서 전주에서 타지역으로 가는 장애인은 물론, 물론 목적지가 전주시인 타지역 장애인들도 이지콜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지콜 이용요금은 편도 이용자의 경우 기본료가 1500원이며, 시내에서 이용할 경우 1km당 100원의 추가요금을, 전주시를 벗어날 경우는 1km당 150원의 추가요금과 통행료를 지불하면 된다. 왕복 이용자는 편도이용 요금과 통행료, 주차료, 대기료(2시간 경과 1시간마다 1만원)를 내면 된다.

이지콜의 일일 최대 이용시간은 전 북지역 내의 경우 8시간까지이며, 전국 이용자는 12시간까지 이용할 수



김승수 전주시장은 이지콜의 전국 운행 시행 첫날인 1일 이른 아침 전주종합경기장에 위치한 이지콜센터를 방문, 이지콜 운행자 등 직원들을 격려했다.

있다. 이용자 우선순위는 이용목적과 장애등급, 이용횟수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시는 향후 콜택시 이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해 3대를 추가 증차하고, 낡은 차량 2대도 이달 중 새것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또, 장애인과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시민,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들이 탑승하는 셔틀버스도 내·외부를 전면 개선해 이달 중순부터 운행될 예정이다.

시는 오는 16일에는 '전주시 교통약

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 최종보고회'를 갖고 1만2,000여명에 달하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저상버스 승강장 시설개선 △콜택시 증차 공급 범위 △저상 시내버스 개선 방향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청취할 방침이다.

시는 이지콜 서비스 개선에 앞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관련규정 정비와 인력보강, 교육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이날 "이동권은

시민들의 생존권이다.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버스와 택시는 시민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일 것"이라며 "단 한 사람의 시민도 공공재인 대중교통 등 각종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는 가장 인간적인 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애인 콜택시 이용 문의 및 서비스 개선에 대한 의견 제시는 전주시 시민교통과(063-281-2542) 또는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이지콜 센터(063-271-2727)로 문의하면 된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이날 "이동권은

전주 수달 서식지 보호 방안 검토

시, 보전대책 다올마당 회의·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전주시가 전주하천에서 서식하는 수달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수달 서식지 주변 도로의 차량 속도를 줄이고, 언더패스 열린구간을 막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시는 1일 전주시 대표동문인 수달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와 시민·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수달 보전대책 다올마당' 회의 및 '전주천·삼천 수달 개체수 조사 및 보전대책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전주하천에 서식하고 있는 수달에게 최적의 서식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삼천 언더패스 통행구간의 차량 속도를 줄이는 방안 △언더패스 펜스 열린구간을 막는 방법 △수달 보호 안내판 및 생태통로 설치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수달 서식 실태조사 및 보전대책 수립을 위해 오는 2018년

4월까지 추진중인 '전주천·삼천 수달 개체수 조사 및 보전대책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갖고, 용역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6월 도심하천의 수달을 보호하고 시민들과 수달의 지속가능한 공존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 현재까지 △수달 서식지(전주천·삼천 수계)에 대한 분포 조사 △수달 서식지 실태, 위협요소(로드킬 등)에 대한 조사 및 보호방안 △수달의 관리·보전 대책 등에 대한 내용으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또, 그간의 용역 진행 과정에서 전주천, 삼천에서 수달 배설물과 발자국 등을 다수 관찰하고, 지난 8월에는 서신교 하류 전주천에서 수달 유영 활동을 확인한 바 있다.

시는 앞으로 다올마당을 통해 수렴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용역에 반영, 전주 하천에 서식하는 수달의 서식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김민근 기자

오늘 군산 OCI에서 화학사고 합동훈련

새만금환경청은 2일 오후 군산일반산업단지에서 OCI(주) 군산공장에서 화학사고 대응 민·관 합동훈련을 실시한다.

1일 환경청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자 추진하는 재난대응중합훈련인 '2017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이다.

이에 새만금환경청을 비롯한 익산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군산소방서, 군산경찰서 등 9개 기관 및 화학안전공동체(기업체) 등 70여명이 훈련에 참여한다.

훈련은 OCI(주) 군산공장의 무수염

산(염산 함량 100%의 가스상물질) 제조공정에서 배관의 노후화로 다량의 무수염산이 누출돼 작업자가 부상을 입는 상황을 가정해 실시된다.

참여 기관들은 ▲사고상황 신고·진파 및 보고 ▲인명구조 및 주민대피 ▲누출물질 차단 및 화학물질 탐지 ▲진류요역도 조사 및 제독 등 4단계로 나눠 화학사고에 대해 조치하게 된다.

특히 이번 훈련은 시나리오와 사전 연습 없이 상황 메시지 부여만으로 실제 사고처럼 진행도록 계획해 대응 능력을 향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김관근 기자

김승환 교육감, 벌금형 확정... 직위는 유지

'학폭 자료제출 거부 지시'... 대법서 직권남용 혐의로 700만원 확정

대법원이 학교폭력 사항과 관련한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의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확정했다.

김 교육감은 벌금형을 받았지만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돼 직위는 유지된다. 당시 무효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경우에만 적용된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교육감이 전북교육청 소속 공무원들과 관내 학교 교장들에게 교육부의 특정감사 자료 제출요구를 거부하도록 지시한 것은 교육부 감사활동에 협조할 의무가 있는 이들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 장관과 다른 견해로 요구를 거부하게 한 김 교육감의 지시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 없다"며 "김 교육감의 지시로 소속 공무원과 학교장들이 감

사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보아 지시와 감사자료 제출 거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김 교육감은 해당 훈련 관련 현재의 위헌여부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헌이라고 생각하고 자의적으로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라는 위법한 지시를 했다"며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2년 12월 교육부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

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라는 지침과 관련해 특정감사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도록 전북교육청 공무원들과 관내 고교 교장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교육부 특정감사단은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 회의결과 및 학교생활기록부 등의 자료와 각 학교 학교폭력 발생 여부, 가해학생 인원,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학생부 기재 여부 등 확인서 등의 제출을 요구했다.

1심은 김 교육감 지시로 학교장 등이 교육부 감사자료 제출요구에 불응한 것은 인정되나, 직권을 남용했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김 교육감이 직무권한을 불법으로 행사해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게 했으며 1심을 깨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상민 기자

'공금 수천만원 횡령' 사립학교 행정실장 집행유예

전주지법 형사4단독(노종찬 부장판사)은 수천만원의 학교 공금을 빼돌려 개인용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A(54·여)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전북의 한 사립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2년간 모두 83차례에 걸쳐 교비와 교직원 4대 보험금 등 5,9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빼돌린 돈을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 판사는 "장기간에 걸쳐 많은 금액을 횡령한 점을 감안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상민 기자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서부신시가지 도청역**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삼덕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

